

‘잃어버린 65년’ 눈물의 재회 시작

금강산 이산가족 단체상봉 남 197명·북 185명 참여 6차례 만남 후 22일 귀환

8·15 계기로 열리는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20일 오후 3시 북한 금강산호텔에서 개최됐다. 앞서 전날 속초 한화리조트에 집결한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 89명과 동 반가족 108명 등은 이날 오전 8시35 분께 버스를 타고 속초를 떠나 금강 산 관광지구로 향했다.

상봉단은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(CIO)를 통과해 이날 낮 12시55분께 금강산 관광지구로 도착, 온정각에서 점심을 먹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. 65년을 기다린 가족들은 들뜬 마음 과 함께 이번에 보면 다시 보기 어려 울지 모른다는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. 이관주(93)씨는 “내래 이번이 마지 막이야. 이번에 우리 조카 만나면 이 제 죽을 날만 받아놓은 거지”라며 “이제 뭐야. 이번에 만나면 내가 죽 을 때까지 못보는거야”라며 눈물을 글썽였다.

이날 오후 3시에 시작된 단체상봉 에는 북측에서 185명의 가족이 참여 했다. 남북 이산가족들은 2시간 동안 상봉행사를 가지게 됐다. 남측 이산가족은 2시간 상봉행사 후 저녁에는 북측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여했다. 한편 이산가족 상봉행사 둘째 날인 21일에는 개별상봉과 객실중식, 단체 상봉 등이 진행됐다. 남측은 이번 행사에서 이동을 최소 화하고 가족들이 오붓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 객실에서 중 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.

상봉단은 숙소인 외금강 호텔 객실 에서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개별 상봉을 하고, 객실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게된다. 개별상봉과 오찬이 끝난 뒤에는 오후 3시부터 다시 2시간 동안 단체 상 봉이 이뤄진다.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오전 작별상 봉 후 공동오찬을 진행한다. 남측 상봉단은 공동오찬을 마지막 으로 2박3일 간 6차례의 상봉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는 22일 오후 육로로 귀환하게 된다.

/뉴시스

박지원, 안희정 판결 놓고 “사법부, 워마드 주장 입증”

박지원(사진) 민주당 의원이 성폭행 등 의 혐의로 기소 된 안희정 전 총남지사가 무 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“(사법부가) 결 국 워마드의 주장이 옳았음을, 우리 가 이들의 주장을 새겨들어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”이라고 지적했다.



박 의원은 20일 오전 자신의 사회 관계망서비스(SNS)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“사법부의 판결은 21세기 대한 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는 극단적인 페미니스트가 되거나 아직도 은장도라도 풀어야 한다는 것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.

지난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안 전 지사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결 을 규탄하는 내용의 집회가 열렸다. 참가자 수만명은 거리에 모여 여성 에게 국가는 없다, 사법부도 유죄라 는 목소리를 높였다. 참가자들은 여 성에 편중되지 않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두루 모였던 것으로 파악됐다.

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“분노의 외 침이 커져가고 있다”며 “판결문을 보 면 위력관계는 인정하지만 위력은 없었다는 전제 하에 피해자의 일관 된 진술은 모두 배척하고 있다. 피해 자가 안 전 지사의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따랐고, ‘피해자답지 못 하다’고 해 결국 피해자의 책임이 있 다고 한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그는 “우리 어머니, 내 아내, 나의 딸, 나의 누나와 동생들이 사법부의 판결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야 한 다는 것이 우울하기만 하다”고 덧붙였다.

/뉴시스



“규제프리존특별법 합의한 국회 규탄”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, 참여연대,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공익 위협하는 적폐법안 ‘규제프리존특별법’ 등을 합의한 국회를 규탄하고 있다.

“인터넷전문은행 산업자본 비율 34%는 무리”

은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박영선, 25%로 제한해야

박영선(사진)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“경제력 집중 현상을 해소하는데 (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) 34%는 무리가 있다”고 지적했다. 박 의원은 이날 오전 qbc 라디오 ‘열린세상 오늘! 김혜영입니다’에 출연해 “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경제 패 러다임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재 별 기업에 너무 많은 부가 붙어있는 경제력 집중 현상이다. 이것을 고치 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 아남을 수 없다”면서 이같이 밝혔다. 여야는 산업자본(비금융주력자)의



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 를 현행 4%에 서 34%로 늘리 는 정재호 민주 당 의원안을 논 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. 박 의원은 최근 최대주주가 금융자 본(금융주력자)일 경우에만 25%까지 늘리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안을 발표했다. 박 의원은 “자본비율을 크게 늘려 놓으면 중견기업이 투자하기 힘들고 버거워진다”며 “중국도 30% 정도까 지 밖에 허용을 안 했는데 우리가 34%까지 허용을 하면 다시 또 재벌 이나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

돌아갈 수밖에 없다”고 지적했다. 박 의원은 자신의 특례법안에 대해 “금융자본이 1대 주주가 되면 그 은 행의 모든 결정은 금융자본이 하게 된다”며 “(가장 강력한 은산분리 규 제를 하고 있는 미국도) 산업자본들 이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금융자본 의 1대 주주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원칙하에 25%까지 허가를 해주고 있 다”고 당위를 강조했다. 그는 카카오 측이 박근혜 정권 시 절 찾아와 은산분리 협조를 요청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“그 부분까지 손 을 대면 제가 지적을 했던 경제력 집중 현상 부분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보 고 있다”며 충수가 있는 IT대기업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했다.

/뉴시스

평화당 신임 사무총장에 황주홍 임명

대변인에 김정현·홍성문 신임 공보실장은 최동환



황주홍(사진) 민주평화당 의원이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. 박주현 대변인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“(무소속인) 손금주, 이용호 의원을 영 입하기 위해 사무총장직 임명을 미뤄 온 측면이 있었다”면서도 이같은 내용 을 전했다. 평화당은 김정현 전 공보실장과 홍성

문 마포갑위원장 을 대변인에, 최 동환 도봉갑위원 장을 신임 공보실 장에 임명하기도 했다. 평화당은 그동 안 미뤄왔던 인선 을 마무리하면서 당원명부 유출, 국민여론조사 반영에 따른 최고위원 당락문제 등 당내 갈등 요인 해소와 현장 행보를 이어갈 방침 이다. /뉴시스

‘죄과 퇴출 공작’ 전 국정원 실장 징역 4년 구형

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에 대해 검찰 이 중형을 구형했다.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의29부(부장판사 강성수) 심리로 열 린 신 전 실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4년 및 자격 정지 4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 다.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“주권자인 국 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, 건전한 여론 형성은 민주주의 발전 토대”라 며 “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직접 개입한 행동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 돼선 안 된다”고 지적했다.

이어 “피고인은 정보 분석 보고의 실질적 책임자로서 원세훈 전 국정원 장의 지시를 수동적 수행한 것뿐이라 고는 볼 수 없다. 피고인도 방안을 마 련해서 보고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주도했다고 판 단된다”고 밝혔다. 신 전 실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 절 ‘(박원순)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 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’ 및 ‘죄과의 반값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’ 등 문 건을 작성하고 방승인 김미화·김재 동씨, 배우 문성근씨 등 당시 정부 비 관적 문화·연예계 인사 퇴출 작업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. /뉴시스

김영환, ‘중도 통합의 정치’ 약속

바른미래당 대표 후보 정부 경제정책 기조 지적

바른미래당 김영환(사진) 당 대표 후보는 20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 서 “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 논란을 비롯해 최저임금제·국민연금 문제 등에 대한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 면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”고 말했다.



중도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”고 전했다. /김진성 기자

“1년 안에 대통령 도와 경제부터 살려야”

송영길 민주당 대표 후보 새로운 성장 동력 약속

더불어민주당 송영길(사진) 당 대표 후보는 20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“당장 1년 안에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



경제부터 살려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 또한, 북방경제 협력위원장을 지 낸 경험으로 북 방경제협력과 남 북협력을 앞당겨 새로운 경제 성 내겠다고 약속했 다. /김진성 기자

세계를 향해, 시민과 함께
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